

오늘의 날씨

맑음	06:47	달림	03:11
맑음	18:38	달림	12:36



광주	☀️	2~14
목포	☀️	2~11
여수	☀️	4~11
순천	☀️	1~12
구례	☀️	-1~13
광주	☀️	-2~14
완도	☀️	2~12
죽산도	☀️	5~10
진남	☀️	1~12
진도	☀️	1~12

목포	밀물(고)	08:56 / 20:53
	썰물(저)	00:54 / 16:29
여수	밀물(고)	05:43 / 17:10
	썰물(저)	12:30 / 23:13

정부기관 사칭 수거책 구속

○...정부기관이 투자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에 함께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금융 사기 수거책이 불합해.

광주 관산경찰은 12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간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을 돌아 다니며 20여명의 피해자를 만나 투자금 명목의 2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A씨와 공모한 B씨는 정부기관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피해자들은 B씨의 소개로 자신들을 찾았을 A씨에게 각자 수천여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

대부분 현금을 가져오게 했으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금을 매입해 현물로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한 달

“키오스크 값이 300만원?... 차라리 안 쓴다”

식당·카페 등 100인 이하 50㎡ 이상 매장 적용  
과태료 최대 3000만원...“현실성 너무 떨어져”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상공인들은 ‘수백만 원짜리 의무’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보다 2~3배 비싼 고가의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28일부터 근로자 100인 미만,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은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기, 자동출입인증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정보단말기다. 다만 가격이 일반 키오스크보다 2~3배가량 비싼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남모씨(56)는 오는 4월 매장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명동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됐다. 남씨는 “의자와 테이블 같은 집기류를 새로 들고 싶네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전혀 몰랐다”며 “기기 가격만 200만~300만원 수준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카페 사장은 “혼

자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키오스크 도입도 고민했지만 유지비가 부담돼 직접 주문을 받고 있다”며 “매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본사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점주들이 과태료 부담을 걱정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총장로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에서 관련 안내가 없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200만원을 들여 키오스크를 추가 설치했는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교체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객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체 비

용까지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키오스크 업체 역시 현장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후 제품 안내를 위해 매장을 방문해도 제도를 모르거나 차라리 키오스크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업주들이 많다”며 “전화나 온라인 문의도 있지만 가격을 듣고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발굴 심층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했고, 집회 무대 위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 등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받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당시 박원 부장판사)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4부(당시 배은창 부장판사)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

尹 규탄집회 참여한 백금렬 교사 무죄 확정

민변 광주전남지부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점표 될 것”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패시지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검찰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제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사회자이자 소리꾼, 방송인으로 성인이 된 예 제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8월 교사직을 잃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반려나무 나눠드려요” 제8회 식목일을 앞두고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반려나무 나눠주기 캠페인’에서 동구청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꽃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는 친한 향기의 사향(천리향) 나무를 나눠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무안공항 재조사 발견 물체 9점 모두 ‘희생자 유해’

12일 사고기 잔해물서 유해 추정 물체 24점 추가 발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1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기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에만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7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오후 들어 재개된 조사에서도 발견이 이어지면서 하루에만 유해 추정 물체 총 24점이 발견됐다.

앞선 조사를 거치며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 9점은 모두 희생자의 유해로 판명됐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가 모두 희생자로 확인된 만큼 이날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 역시 희생자일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조위는 지난날 12일부터 활주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사고기 잔해물을 컨테이너 4동으로 옮겨 보관하며 잔해물 분류와 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유류품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도 수집하고 있다. 부피가 큰 기계 포리탈등 등 일부 잔해는 별도의 가건물을 설치해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는 10여명씩 3개 조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잔해물 조사는 앞으로 10차례 이상 더 이어질 전망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일·생활 균형...여성친화적 통합지방자치 실현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추진체계 정책토론회

거버넌스 차원의 성평등 정책 설계 필요성 제기  
전담 조직 설치·현장 실무자 처우 개선 등 요구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여성친화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과 일·생활 균형 정책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 통합 이후 필요한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성평등 도시 모델을 설계하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종분 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향후 성평등 정책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전 정책관은 “현재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책임자는 대부분 내부 승진 공무

원으로 채워져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이 약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정책국이 아닌 정책관 체계이며, 광주시는 국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조정 권한이 제한되고 부서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의 위상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와 전남은 여성의 경제활동 환경, 돌봄 구조, 가족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존 지역사회에 존재하던 불평등 구조가 더 큰 규모로 재생산될 수 있다”고 우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 통합 이후 필요한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성평등 정책을 단순한 복지 분야가 아닌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평등이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 목소

리를 낼 때 비로소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다”며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사회적 부담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처우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명노 광주시의원도 광근영 광주동구여성희망창작소 사무국장이 성평등 정책 조직 확대와 관련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광근영 사무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여성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희망창작소와 같은 거점 공간을 각 자치구로 확대해 풀뿌리 기반의 성평등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시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전담 조직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가족국이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사례처럼 국 단위 조직의 장을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